

## 아파트도 “브랜드 天下”

“아파트 칠을 다시 하는데 “래미안”이란 상표를 써도 되나요”

“TV 광고에 나온 래미안 열쇠고리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요즘 삼성물산 건설부문 직원들은 이런 문의전화화를 많이 받는다. 특히 열쇠고리를 사려는 문의는 하루에 20통이 넘는다.

주택시장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

롯데건설보다는 “롯데캐슬”, 대림산업보다 “e편한세상”, 현대건설보다 “홈타운”, 현대산업개발보다 “아이 파크”를 소비자들은 기억한다.

건설회사의 이름이 빠진 자리를 브랜드명이 채운 것. “농심”이 아니라 “새우깡”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제조업과 다를 바 없다.

브랜드 바람은 외환위기 이후 시작됐다.

후발 업체들이 회사 인지도가 낮은 대안으로 브랜드를 키우기 시작했다. 분양가 자율화(98년 상반기) 이후 고급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제품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브랜드를 사용한다.

현대산업개발이 국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로 평가받던 “현대”를 포기하고 지난해 3월 “아이 파크”를 내놓은 게 대표적인 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도 점점 치열해지는 추세다.

대림산업은 올해 방송 광고비로 70억원을 잡아왔고, 전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광고 외에도 학생설계 공모전, 주부 대상 인터넷교육 등을 통해 꾸준히 “래미안”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도 아이 파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20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쏟아부었다.

출처 동아일보

## 반도체 지적재산 안전장치용 보험상품 등장

반도체 지적재산(IP)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복합연구센터(일명 알바센터) 내 가상 IP거래소(VCX)는 30일 보험사 에이언(Aon)과 함께 지적재산(IP) 라이선스에 관한 보험상품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대 업체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경우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분쟁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IP 거래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적재산(IP)의 소유권 및 라이선스 과정에서 술한 특허 침해 공방과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송사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하나의 칩에 많은 회로블럭이 담기는 SoC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의도와 관계 없이 제 3자의 IP가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VCX 측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 IP 소유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거나 공방이 벌어질 경우 지난 1년간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이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 침해로 인해 IP가 리콜될 경우, 이에 관련된 비용도 모두 보험처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보험 상품은 VCX 회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종합연구센터의 모델로 꼽히고 있는 알바센터와 VCX는 모토로라, 지멘스, 노키아, 도시바, ARM 등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출처 inews24

BM특허 출원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인터넷 미팅 BM특허 “러시”

인터넷 게임이나 사주“채팅”이벤트를 이용해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는 다양한 미팅방법에 관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청(www.kipo.go.kr)은 BM특허 증가와 함께 1999년이후 올 4월말까지 이성을 연결시켜주는 63건의 특허가 출원됐다고 밝혔다.

출원 유형은 이상형을 매칭시켜주는 방법과 화상이나 채팅을 이용한 커플링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개된 출원 특허중에는 수치적 데이터로 산출된 개인 정보데이터를 기초로 이성간 궁합 정도를 계산한 뒤 회원에게 이메일로 가장 잘맞는 이성을 알려주는 방법을 비롯해 이성간 신상정보를 토대로 미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일정 반경내 이성이 있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있다.

특허청은 엔터테인먼트 및 결혼정보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해 이성을 연결시켜주는

## 아파트도 저작권 시대

아파트 평면, 저작권 시대 본격 개막.

주택업체들의 평면 개발 경쟁이 가열되면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신 평면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건설업체에서 모방할 수 없는 데다 소비자들에게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가 분양 성공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듯 머지 않아 평면 구조가 아파트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평면도 하나의 지적 재산권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 5년간 806건 신평면 저작권 등록신평면 저작권 등록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외환위기를거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욕구가 다양화(多樣化)·세분화됨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이에 맞는 평면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다.

그 후 대형 건설업체에서 홍보수단으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신평면을 활용했고, 이것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경쟁은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상위 10개 건설업체의 경우 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50건 정도의 저작권 평면을 확보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을 마친 평면 견수가 97년 이후 올 2월말까지 총 80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97년 4건에서

- ▲ 98년 1건
- ▲ 99년 78건
- ▲ 2000년 453건
- ▲ 2001년 262건

▲ 2002.1~2월 8건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지난 2000~2001년에만 무려 715건의 신평면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다.

◆ 중소형 평형, 보다 넓게 설계해라 건설업체 <평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평면 구조가 몰라보게 바뀌었다.

소형 평형에도 3베이 구조가 정착되고 대형 평형에는 입주자스타일에 맞춰 가변형 평면이 보편화되는 등 획일적인 평면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평형별로 보면 20평형대의 경우 서민 대상에서 전셋집 용도에 맞춰 평면구조가 달라진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4등분해 현관문 쪽에 부엌 <방 <화장실, 베란다쪽에 거실 <안방을 배치한 것이 일반적.

그러나 최근 선보이고 있는 20평형대의 경우 계단식 구조에다 아파트 정면에 방 2개를 두는 3베이 구조가 일반적이다.

또방을 3개 배치한 확장형 발코니도 선보이고 있다.

30평형대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다.

욕실 <주방<안방등 모든 부분에서 과거와 다른 신평면이 잇따라 개발됐다.

우선 욕실은 개수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

주방은 보조주방이 생기면서크고 넓어졌으며 가족실 기능까지 겸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추세다.

안방도베드룸 개념을 도입, 옷장 <파우더룸 <욕실까지 갖춘 다목적 공간이 되고있다.

과거에는 30평형대의 경우 앞면에 거실 <안방이 배치되고 뒷면에 방 <주방이 들어서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 대형,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라 40~50평형의 대형 평형대 평면 구조는 입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변해가고 있다.

안방 <주방의 확대 및 독립공간화, 가변형 평면 도입 등이그것이다.

40평형대의 경우 과거 6등분해 앞면에 방 <거실<안방을 배치하고, 뒷면에 방 <부엌을 배치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평면의 특징은 각 부실이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을 줄이는 대신 공간 배치를 여유롭게 하고 확장형 발코니 설계로 작은 방 조차 서재 등으로 사용토록 돼 있는 것이 과거 평면과 다른 점이다.

즉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필요공간은 넓히면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있는 방향으로 평면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50평형대 이상은 단독주택의 저택에 해당되는 규모다.

과거 50평형대 평면구조는 많은 식구가 사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가족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반면 최근 선보이고 있는 대형 아파트는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나눈 것이 특징이다.

부부 전용공간과 거실, 부엌을 노인 가구가 사용하고나머지 방을 자식 세대가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업의 경우 현관에서곧장 드나들도록 하는 등 동선을 분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특히 가변형 평면 시스템을 도입, 입주자들이 가족수에 따라 거실과 방, 부엌과 방 등을 합치거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출처 서울경제

## 특어 선진국 반열 올랐다

지적재산 후진국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월한 기술특허와 주도면밀한 특허전략 없이 승자가 될 수 없다. 특허는 이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우리의 지식경쟁력은 세계 5~10위권. 현재 13위에 랭크돼 있는 GDP 순위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2318건으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8위에 올랐다. 특히 국제특허의 최대 타깃인 미국에 출원한 건수는 7위를 기록했다. 또 전체 특허출원건수는 28만9000건으로 세계 5위에 랭크됐다.

심사능력도 국제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지난 97년 세계 178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 다른 나라에 출원되는 특허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10개 특허선진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면을 들여다 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첨단 기술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넓은 조직구조를 고쳐야 하고 선진국의 두배에 달하는 특허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 현재 특허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행정

쇄신을 추진중이다. 그 핵심 사안들을 짚어본다.

◇ 전자정부 올해 완성. 집에서 특허민원 낸다 = 특허행정 선진화의 핵심은 전자화. 민원 건수가 폭주하고 심사업무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수작업처리하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특허청은 올해 안에 모든 특허업무를 전자화하는 특허넷시스템(KIPOnet)을 구축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특허청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특허민원 비율은 71% 정도로 출원 및 심사분야는 이미 전자화가 완료됐다. 여기에 올 하반기 중 온라인심판 등륙과 이의신청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화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하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전산화된다.

특허 출원자는 집에서 전세계의 기술검색은 물론 인터넷으로 특허서류 제출 등 특허민원 업무를 끝낼 수 있다. 또 인터넷 बैं킹으로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결과는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통지받게 된다. 각종 증명서 교부와 특허정보 조회 등의 민원은 홈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다.

◇ 심사처리 기간 단축=특허청은 2005년까지 인력보충과 자구노력을 통해 특허처리 기간을 15개월로 줄이고 1인당 연간 특허심사처리 건수를 25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심사처리 기간은 지난 96년 36개월에 달했지만 지금은 23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독일의 10개월, 미국 13.6개월, 일본 21개월에 비하면 아직도 길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EU가 59건, 미국 70건, 일본 208건에 비해 우리는 350건에 달한다. 특허청은 심사업무를 선진화하는데 6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중 50명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550명은 올해부터 3년간 순

차적인 확충할 계획이다.

- ◇ 신기술 전담할 신기술심사국 신설 = 정보기술(IT) 바이오(BT) 나노(NT) 등 미래 첨단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을 전담 "심사하는 신기술심사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생명공학심사담당관, 컴퓨터심사담당관 외에 나노기술심사담당관, 환경기술심사담당관,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디지털기기심사담당관 등이 새로 신설된다.
- ◇ 특허 사업화 적극지원 = 지난달 현대리서치연구소가 특허를 보유한 업체 및 개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율은 26.6%에 불과하다. 또 사업화로 수익을 낸 성공률은 11.2%로 더 낮았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와 특허기술 상설장터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또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중기청 등과 1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원중이다. 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은 지난해 506억원에서 올해 1039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국가표준 선정되면 기술로 왜 못받나"**

-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상품·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할 때 국제표준기관들은 이들에게 기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반해 한국은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규격을 국가표준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개인이나 기업들이 기술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나는 실정이다.
- 관련부처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 해당 상품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기술료를 받지 않는다고 사전에 합의해야만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산자부와 정통부 관계자는 "산자부의 국가표준 규격인 KS나 정통부의 국가표준 규격인 KICS는 제정지침에 특정인의 제품이나 기술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제정에 앞서 관련업계가 기술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의해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 정부 관계자는 "무기술료 방침은 국가가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한 상품·기술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을 경우 특허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무기술료 원칙의 배경을 설명했다.
- 그러나 ISO 등 국제표준기관에서는 우수한 상품이나 기술을 표준규격으로 채택했을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자가 기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MPEG2·MPEG4 규격에 상당부분 자사 기술이 채택돼 지난해에만 1800만달러의 기술료를 거둬들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만

100억원의 기술료를 받았으며 매년 기술료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산자부의 KS나 정통부의 KICS는 아무리 우수한 상품이나 기술이라도 소유권자가 기술료를 받겠다고 고집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는 국가표준을 통해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돼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들은 “무기술료 방식 국가표준 제정 방침은 기술료에 대한 사전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상품이나 기술을 신속히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며 자칫 이보다 못한 기술이나 상품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표준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우수한 기술이나 상품을 로열티 없이 제공하려는 업체나 개인이 드물어 국가표준 제정 때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토했다.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동전화단말기 한글입력방식 표준화도 업체들이 무기술료에 합의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됐으며 이마저도 일부 업계가 반발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업계에서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어 스스로 많은 돈을 들여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기술료 없이 기술을 제공하라는데 누가 국가표준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느냐”며 국가표준화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전자신문

발특2002/7